

메가특구·부동산·레버리지 ETF… 여야, 대정부질문 격돌

오늘 민주, 내일 국힘 교섭단체 연설
9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 진행

민주당, 용산공원 정비 법안 속도
국민의힘, 용산공원 녹지보존 중점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인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각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부동산 공급 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호르무즈 파병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6개 부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추석 전에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 7~8일 각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일부터 14일까지(주말 제외)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소화한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국회 쟁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중점 사업과 쟁점 입법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당정이 지난 4일 당정협의회에서 3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 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달 내 발의하고 연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김민석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별법의 신속 처리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남권 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면제 등 노동 규제 완화 적용 여부도 관심이 높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조화하기 위한 여러 이해 당사자(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화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뒷받침할 공급 법안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본회의에 처리가 연속으로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용산공원 부지 중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정기국회에서 노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끄는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 용산공원특별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 내 녹지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 만큼,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용적률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만으로 증시 불안정성을 조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덮을 수 없다며 국정

조사를 버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했는지 그런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서 누구 때문에 됐는지 이런 것을(조사하는 것이)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위 차원의 현안질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결될 것이라고 국정조사 실시엔 선을 그었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란 고위 당국자가 정부가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견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암호를 놓은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파병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프랑스 국민 방문 영화·K콘텐츠의 미래 논의

3박5일 일정… ‘뤼미에르 서밋’ 참석
엘리제궁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민 방문에 나섰다. 영화·영상산업 국제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어떤 논의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번 프랑스 국민 방문은 3박5일 일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 방문 당시 이 대통령에게 서밋의 공동의장을 제안하며 프랑스에 국민 자격으로 방문해달라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뤼미에르 서밋 참석 이후 이 대통령은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한 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방안과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비즈니스라운드에 이블에도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민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9일에는 브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 국민 방문에 나섰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오찬을 마친 뒤 악수하는 모습.

/청와대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민방문 기대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이란전 기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의힘, 김승원·용혜인 ‘쌍끌이 낙마’ 총공세

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에
용, 의원직·배우자 논란 문제삼아
李 대통령에 ‘후보 지명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쌍끌이 낙마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인사 검증 실패로 연결해 대역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겨냥해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그런 인물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단순한 공익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사퇴해 당이 원외로 밀려나면, 꼼수로 받던 연 11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용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문제도 쫓았다.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최근 5년간 기본소득당에 1억 9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낸 뒤 약 363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두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삼성 노조문제 확대, 노무관리에도 부담

» 1면 ‘檢 수사에 해외서 여론…’서 계속

이에 삼성전자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해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협약 타결 과정에서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만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쟁의 관련 명

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협상 타결 이후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동행 노조도 대응에 나섰다. 초기업노조에 명단 작성 경위와 활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사측에는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노조 문제가 검찰 수사와 해외

여론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무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DX노조가 문제 삼은 인력 운용은 삼성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AX와 맞물리면서 노사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AX를 핵심 경영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연구개발(R&D)부터 생산·마케팅·지원까지 업무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